

##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!

- 7월부터 국가산단, 물류단지,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

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‘대체산림자원 조성비’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.

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,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.

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‘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’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, 물류터미널·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% 감면한다.

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·증축·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% 감면할 계획이다.

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남성현 산림청장은 “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며 “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산림복지국	책임자	과 장	도재영 (042-481-4140)
	산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신건섭 (042-481-4141)